

[긴급토론회]

**강간문화의 카르텔:
언론의 젠더감수성과 저널리즘윤리**

▲ 일시 2019년 5월 9일 (목) 오후 3시-5시 30분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민우회

· 순 서 ·

- 인사말: 김세은(강원대학교,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사회: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 기조발제: 최이숙(동아대학교)
- 라운드테이블
 - 고이경(DSO 디지털성범죄아웃)
 - 김경희(한림대학교)
 - 김효실(한겨레)
 -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 오정훈(전국언론노동조합)
 -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간문화¹⁾의 카르텔: 언론의 젠더감수성²⁾과 저널리즘 윤리

최이숙 (동아대, socio21@gmail.com)

1. 들어가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공유된 무관심³⁾

당시 정치인들은 요정정치가 유행이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밤에 이뤄졌다. 대하, 양미암, 옥류장, 청운각 등 서울 시내 한다하는 요정이 모두 정치부 기자들의 주요 취재 장소가 되었다. 덕분에 술은 많이 얻어먹었지만(중략) (최서영, 2007. 9.)

2019년 기자 단톡방에서의 동영상 불법유포 사건은 연예인 단톡방, 대학생들의 단톡방과는 또다른 충격을 준다. 언론인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성범죄 동영상에 대한 불법 공유가 문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라는 저널리즘 윤리가 땅에 떨어진 우리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 공중에 대한 공감각이 결여된 언론인이 형성한 저널리즘이 과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의 연구자들이 황망한 감정이 든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해방 이후 한국 언론의 문화와 생산환경에 비춰볼 때, 한편으로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오랫동안 한국의 언론, 특히 (남성)언론인은 한국사회 강간문화의 방조자 또는 공범자였다. 취재를 빌미로, 특종을 얻기 위해, 언론사(주)의 운명을 가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기자들은 취재원/정책결정자들이 드나드는 기생집, 룸싸롱에 출입했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조했다. 이는 비단 취재원과 관계에서, 취재처에서 나타난 현상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적어도 여성언론인의 수가 증가하고, 여성주의가 우리사회의 대항담론으로 떠오르기 전까지(그 이후에도), 기자사회 및 주류적인 저널리즘 문화에서 여성의 몸은 품평의 대상이었다. 취재원, 동료기자를 막론하고 여성은 뉴스룸의 불거리였다. 오죽했으면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30년 경력의 여기자협회 회장이 자신의 연설에서 한국에서 여성은 창녀와 마누라밖에 없다고 공언할 정도였을까?(윤호미 구술인터뷰, 최이숙 2009)

민주화, 여성주의 담론의 부상, 여성언론인들의 고위직 진출이 ‘여풍’이라는 이름으로 두드

- 1) 강간문화란 강간과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이 용인/정당화되고 때로는 세금이나 죽음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테러리즘에 대한 관대한 이 문화는 매우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Dodeg, 2016).
- 2) 언론의 젠더 감수성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 젠더 감수성, 저널리스트의 젠더 감수성, 그리고 미디어 조직의 젠더 감수성을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 생산환경을 구성하는 저널리스트, 미디어 조직의 젠더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3) 공유된 무관심이란 한 사회, 하나의 문화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문제제기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러졌던 200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기자들의 수필 속에서 림싸롱은 여전히 생물학적 여성들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공간으로 언급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필자와 인터뷰했던 20대의 전직기자는 경제부 기자시절, 취재처에서 기자들을 림싸롱으로 데리고 갔으며, 귀가하고 싶었지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자신을 업소의 여성이 오히려 불쌍하게 쳐다봤다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과연 과거 남성기자들이 해왔던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강간문화와 여성 혐오 정서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2010년대 들어 강간문화 형성자로서 언론인의 행동은 디지털 공간으로 이전해갔다는 점이다. 2017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기자 4명이(전국지, 경제지 기자 포함) 동료 여성기자의 인물을 품평하고 성희롱한 사건 발생했다.⁴⁾ 그리고 2019년 남성기자 30여명이 비밀리에 운영한 단톡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혐오 문화에서 언론계도 자유롭지 못함을, 강간문화 카르텔의 한 구성원임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지금의 사건이 일부 언론인들의 일탈이나, 일부 남성기자들의 박약한 젠더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언론계 내에서 취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왔던 문화가 만들어낸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생각한다. 강간문화의 카르텔 속에서 오랫동안 언론은 주요 주체였지만, 이를 취재의 한 부분으로 용인해왔다. 그리고 이는 언론생태계의 일종의 공유된 무관심으로 자리했다.

이 글은 이 공유된 무관심이 어떻게 깨지지 않고 수십년 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기자사회 내에 존재하는 강간문화에 대한 목인을 깨고 언론의 젠더/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2. 공유된 무관심으로서 ‘강간문화’는 어떻게 형성/유지될 수 있었는가?

알려져 있다시피 저널리즘은 사회와 함께 움직이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널리즘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다. 리즈의 슈메이커(Reese & Shoemaker, 1996)의 계층화 모델이 시사하듯⁵⁾, 저널리즘의 내용, 저널리즘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취재 관행 및 취재 윤리, 미디어 조직의 행위와 특성은 특정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위 강간문화를 비롯한 언론계 내의 지배적 의례들은 미디어 조직이 놓여있던 특정한 조건 속에서 사회,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1) 공유된 무관심의 형성

언론인들의 회고록에 비춰볼 때, 권위주의 정부 시기 언론의 강간문화 카르텔로의 참여는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생집에 숨어들었다가 특종을 한 사연이나,

4) 노컷뉴스에 의하면, 서로 다른 언론사 30대 남자 기자 4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신변잡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나 출입처의 동료선호배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관계 여부, 신체 특징을 리스트로 뽑아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공개되었던 이 사건으로 4명의 기자는 기자협회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조직에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정민경, 2017. 12. 14),

5) Reese & Shoemaker의 미디어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개인적 요인, 뉴스 제작 요인(취재 관행), 조직요인, 사회적/제도적 요인,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계층화된 방식으로 모델링 하였다.

술을 못하는 여성기자가 정치, 경제, 사회부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일상화된 지배 엘리트 문화의 언저리에 한국의 취재 기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의 저널리즘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을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정부 시절, 일상적인 취재 활동은 물론 정부/기관의 공식 브리핑, 기자회견 등이 모두 막혀있던 상황에서, '특종'을 잡아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연출을 활용한 정보의 획득 또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망이었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공식회의, 기자회견등)이 아니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면(박승관, 1994), 언론의 이러한 취재 행태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기자들이 기생집을 중심으로 취재하는 것, 거기서 술을 함께 먹고 유흥을 증기는 것은 소위 '취재행위'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⁶⁾



<그림 1> 직업의식

출처: 서울신문사보. 1969. 6. 25, 3.

전통적으로 저널리스트는 정보를 독점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노동은 관계적 성격을 띤다. 취재원과 기자와의 관계, 그리고 기자 공동체는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교적 최근까지 취재원-기자의 관계, 기자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는 비윤리적 행위-예를 들면 촌지, 식사접대, 술접대 등-를 공유함으로써 끈끈하게 유지되었다. 언론인에 대한 '예우'라는 이름으로 수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정보생산자로서의 기자의 위치, 면세점을 조금 넘었던 열악했던 처우 덕분에 이러한 행위는 유지될 수 있었다. 다른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끈끈히 만드는 요인이었고, 언론인은 이러한 성착취적인 문화를 연행하고 유지하는 행위자였다

강간을 용인하는 문화는 비단 취재 현장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입입이 담배 피워물며 입입이 농담 음담"(이영희, 1978, 184쪽)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편집국은 "음담패설 공해에 시달리는" 공간(같은 글, 186쪽)이었고, 기자들이 모였을 때 빠지지 않은 것은 외설스러운 농담이었다. <그림1>이 시사하듯, 여성의 몸에 대한 품평이 직업의식으로 표현될 정도로 언론사 내에서도 남성언론인은 성애화 된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봤다.

6)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정광모는 대통령의 경주 방문을 수행하던 과정에서의 겪은 에피소드는 취재 현장의 술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준다.

"정치부장을 불러올린 사주(장기영)는 '미스정은 술을 안하니까 혹시 술자리 같은 곳에서 기사가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 부장이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라' 이래서 내려왔지만 당시의 장사주는 기사도 기사려니와 사주 개인의 신상문제(장기영사주의 경제 부총리 입각)에도 촉각이 날카로울 때라서 검사 검사 그렇게 된 것이다"<정광모(1978). 음주수난. 여기자, 238쪽>

2) 견제는 미약했고, 비판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리즈 & 슈메이커가 제안한 계층화 모델의 한 수준에서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발생한다면, 언론의 보도, 언론인의 취재윤리/관행, 미디어 조직의 모습, 그리고 저널리즘 생태계를 조건지우는 사회/정책/구조적 부분, 그리고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도 변화는 나타날 것이다. 강간문화에 대한 비판과 극복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내부 견제 세력의 존재나 견제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외적 자극(또는 이 두 요소의 상호작용)이 작용했을 때 가능하다. 언론윤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외부의 다양한 견제세력이다. 특히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집단/주체로는-여성기자, 여성운동, 관련학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통시적으로 볼 때 공유된 무관심이 깨기에는 내부 견제 세력의 힘은 오랫동안 너무 약했다. 언론계 내의 주류적인 문화와 흐름을 바꿔내기에는 여성언론인의 수는 너무 적었다. 이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조직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critical mass가 될 수가 없었다. 성착취적 문화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던 정치, 경제, 사회부에 진입하거나 경험한 여성언론인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이는 미디어 조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화이전 여성언론인의 수가 (한번이라도) 10명이 넘었던 곳은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정도였다. 여성기자를 일종의 볼거리로, 시집 가기 전에 잠깐 머물다 갈 존재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존재로 사유했던 시대적 여건이나 조직의 풍토를 고려할 때, 이들이 성착취적인 문화에 반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널리즘 내부,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의 윤리성을 이야기에 기자조직이나 개별 기자들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았다. 1980년대 5공화국 시기까지 “기자가 월급으로 사냐?”라는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주가 있을 정도로 대졸자들의 월급에 비해 박봉이었다. 취재 활동 과정에서 이들은 때때로 국가 폭력과 마주하거나 상시적인 검열을 체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 한국의 기자윤리를 규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이었다. 기자윤리 관련 이슈 중 ‘춘지’문제가 중요 문제로 부각된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 위치한다. 기자윤리는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 획득의 문제, 이를 통해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때로는 계몽)하는데 맞춰졌을 뿐이다. 이러한 윤리 담론 속에서 기자들은 언제나 (잠재적) 희생자/피해자로 위치 지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 역시 ‘편집권’을 둘러싼 투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취재 과정에서 논쟁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는 있는 활동에 대한 성찰(ex-취재원에 대한 고압적/강압적 취재, 잠입취재, 문서 빼내기 등)은 물론 ‘젠더’와 같은 조직 내의 차이의 문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주류 기자사회는 사유할 이유도 없었고 사유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다.

‘강간문화’로 통칭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회적으로나마 이뤄진 것은 90년대였다. 여성기자의 수적 증가로 무엇이 저널리즘을 남성중심적인 노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기자들은 어떻게 소외되었는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언론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남성적 연대(기자-기자, 기자-취재원)를 강하게 유지하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거론되었고, 이 남성적 연대가 여성들이 언론노동의 핵심부서에 진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배제되는 이유로 거론되었다. 아쉽게도 해당 문화에 자체에

대한 공격적인 문제제기는 거의 부재했다. 즉 술자리, 룸싸롱 문화가 갖는 비윤리적인 특성에 대해, 해당 문화가 어떻게 저널리즘 전반-보도, 조직문화 등등-에 걸친 젠더 무감성으로 연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미디어 조직, 그리고 취재현장에서 기록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은 비밀비재했지만, 90년대 이후 조금은 변화된 담론 지형 속에서도 이는 거의 환기되지 못하였다. 그 초점 역시 언론계 내부 보다는 외부로 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6년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당시 관련 단체의 쏟아냈던 비판이 시사하듯 언론사 외부에 속한 가해자에 대해 언론은 매우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 하지만 2009년 장자연 사건 당시 한 신문사 기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처벌 받고 신문사 사주가 피의자로 거론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의 강간문화에 대한 자성은 없었다. 2018년 미투 운동 과정에서 언론계 미투 운동에 대한 보도는 소극적 보도 또는 무보도 현상으로 나타났다(한희정, 정의진 2019). 오랫동안 기자집단은 내집단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성찰하는데 인색했다. 기자사회/공동체가 설정한 윤리적 이슈는 외부적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즉 외적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직업적 에토스를 고려할 때 언론사 내에 존재하는 각종 성차별, 강간문화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주류적인 기자집단에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을 지도 모른다.

3. 저널리즘 윤리가 자리할 수 없는 2019년 언론생태계⁷⁾

사이버 공간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연대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장이면서(김수아, 2007, 2012),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젠더질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온라인 성폭력의 증가추세가 시사하듯, 강간문화는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기자 단톡방 사건 역시 언론계 내의 강간문화가 사이버 공간으로 까지 옮겨진 현상일 것이다. 다단계의 인증과정을 거쳐 운영된 이 단톡방은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을 뛰어넘어, 온라인 공간이 더욱 은밀하고 강화된 혐오범죄의 산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바일 메신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성착취적인 대화는 자리가 파하면 함께 사라졌던 이전시기의 음담패설과 달리, 기록으로 (영원히) 남으며, 빠르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일상에 파고든다(Dodge, 2016).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적 대화와 폭력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는 낮으며, 온라인 중심의 대화가 상대에 대한 공감능력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약화시킨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Turkle, 2012, 2015/2018), 단톡방 사건은 언론계 내에 성적 혐오와 폭력이 은밀하고도 무감하게 일상화될 위험을 시사한다.⁸⁾

어떤 사람들은 저널리즘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제도이고, 저널리스트들 역시 사회적 존재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취재하는 공간 역시 한국사회의 혐오적 정서와 문화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7) 필자는 흔히 언론현장을 지칭하는 언론계라는 말 대신 언론현장, 현장을 지원하는 제도/기관, 그리고 언론학계를 포괄하기 위해 '언론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8) 정준영, 승리 단톡방에서의 대화, 젠더 문제는 아니었지만 동료 학생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보였던 부산지역 여학생 단톡방의 대화는 자신들이 저지른 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과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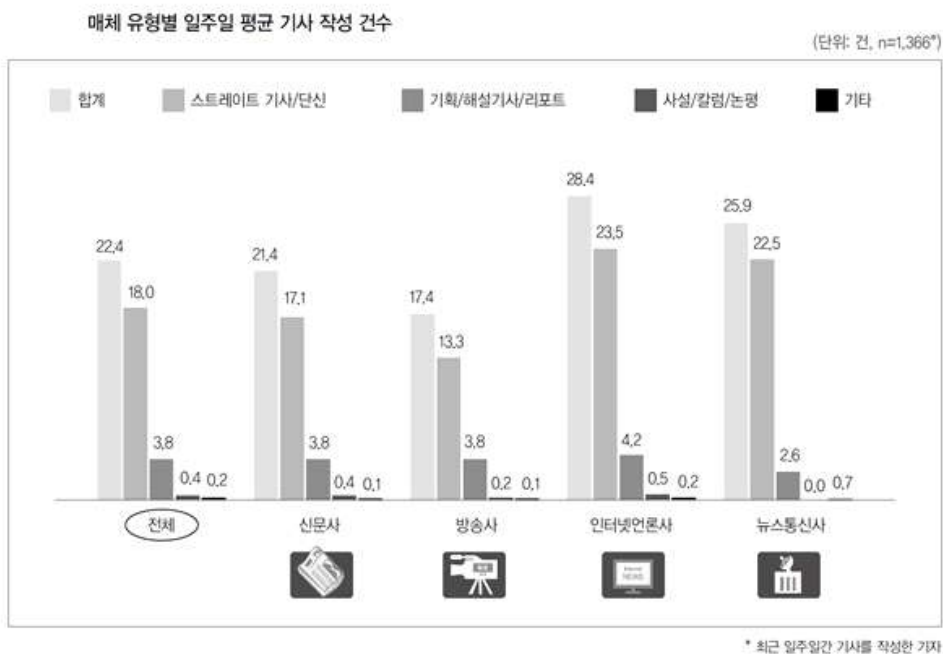
것은 땅에 떨어진 언론/언론인 윤리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탈사실의 시대’에도 저널리즘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신이 취재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지도 이들에 공감하지도 못하는 언론인의 관점/태도가 존재한다면, 이는 이들이 기자로 육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정되어야하고, 그 책임은 언론(생태계)에 있다는 전제 역시 존재한다. 문제는 왜 일부 언론인들이 자신의 존재적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비윤리를 넘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는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젠더/인권감수성의 결여, 성찰성이 자리할 수 없거나 자리하지 못한 언론생태계의 상황 때문은 아닐까?

1) 저널리즘의 변동, 시장주의, 인권/젠더 무감성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일컬어 혼종적 미디어 환경이라 규정되고 있다.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레거시 미디어(종사자)와 제도화되지 않은 미디어(생산자)가 공존하고 있다. 더 이상 뉴스는 기성의 언론인/언론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지도 않으며, 이슈의 당사자와 수용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기성 언론의 게이트 키핑 파워는 약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언론 환경은 주로 시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저널리즘 생태계의 파편화 다양화 현상은 미디어 조직을 치열한 경쟁의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언론의 상업주의화 현상-물량(부수등) 경쟁, 수익성에 대한 가치부여, 치열한 특종경쟁과 자사이기주의-은 더욱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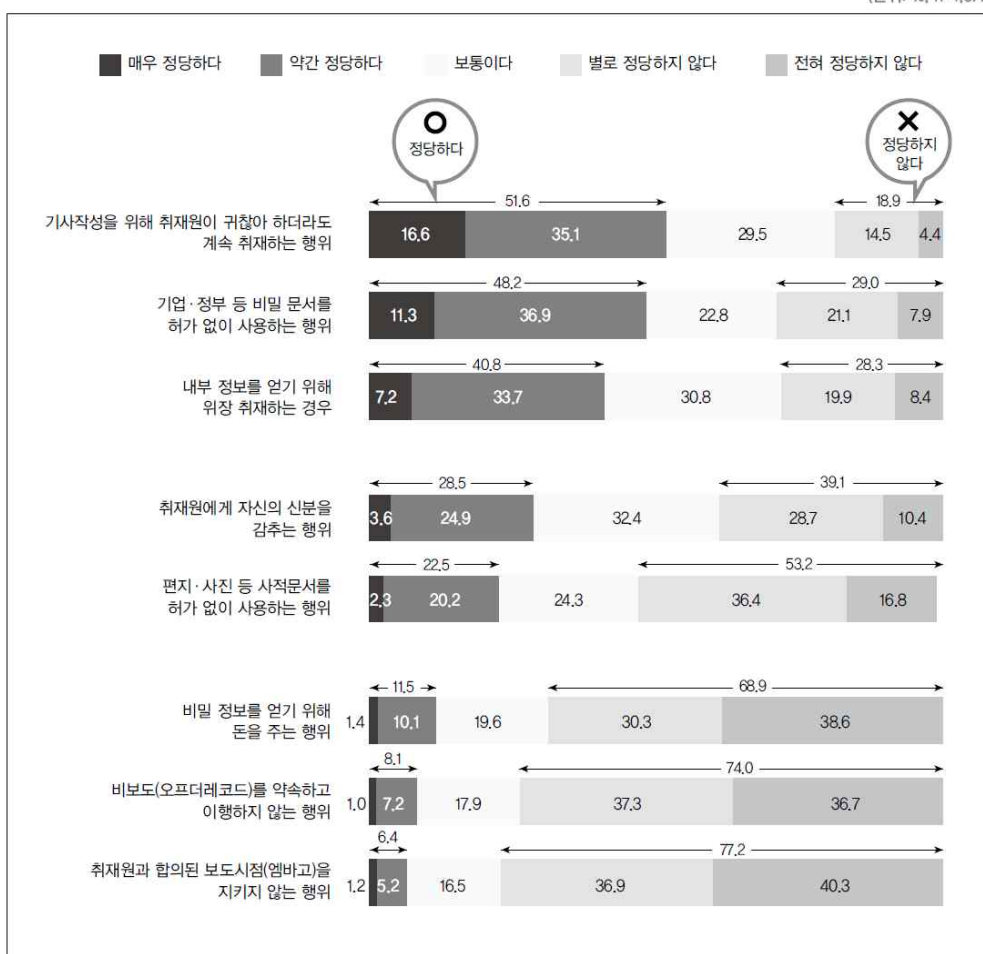
현재 기자들의 노동환경 역시 좋은 저널리즘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기자들이 일주일동안 평균적으로 작성하는 기사의 건수는 22.4건이었다. 하루 평균 4건이 조금 안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주당 기사작성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 중 스트레이트 뉴스 보도 기사의 비중이 많은 데, 이는 격화된 시장 경쟁,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주류를 이룬 환경에서 심층적 기사보다는 스트레이트 뉴스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에서 심각한 내용의 보도 보다는 보다 자극적이고 연성적인 부분의 뉴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취재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취재의 비중이 줄고,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취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인 2017>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우리 언론인의 인권감수성 및 취재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원인은 기자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앞서 언급한 언론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인들의 절반이상이 언론 보도에 따른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와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12.3%, 약간 심각 47.3%)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언론사간의 특종 및 속보경쟁(34.2%), 취재윤리에 대한 인식결여(22.2%), 흥미위주의 보도 때문(17.6%)로 나타났다. 논쟁적인 취재방식에 대한 평가결과나 미투 운동 과정에서 속보 경쟁에 함몰된 기자들의 취재과정이 보여주듯, 아직까지 ‘사실 확인’, ‘기사작성’이 취재원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위치했다.

<그림 2> 취재방식의 정당성 평가(한국의 언론인 2017, 90쪽)



개별 언론인의 인권감수성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뉴스생산조직 및 그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2017년 동료 여성기자에 대한 온라인 단톡방 사건 당시 가해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가 동일하게 등장했다는 점이다.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해당 사건이후 이들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을 기자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모든 언론사에 언론사들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기자 단톡방 사건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에 소속기자가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할 것이다.

언론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강간문화의 카르텔 속에 포함된) 엘리트 정보원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원과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저널리즘의 다양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들의 연대(boy's network)에 의존하는 취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실제 기자들 중의 많은 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으며, 취재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개된 현실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여성주의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시장이 저널리즘을 견인해가는 구조에서 젠더 이슈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또한 Usher 등(2018)의 언론인의 트위터 이용 관련 연구가 암시하듯, 온라인 공간에서의 취재원과의 관계 맺음, 기자 집단 내의 소통에 있어서도 젠더 불균형성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여성기자들의 경우 여성기자들끼리, 여성기자-여성취재원 간의 관계 맺음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등장과 취재방식/문화의 변화를 젠더적 시각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공감적) '윤리'를 키우기엔 부족한 한국의 기자교육

공중에 대한 공감과 책임을 전제하는 저널리즘적 윤리가 정립되었다면, 사회적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 저널리즘 장에 진입을 준비하거나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자로서의 교육/훈련과정 즉 직업사회화를 통해 일정부분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기자들의 교육/훈련과정은 대학 또는 유관기관에서 진행되는 공식교육 그리고 이제 막 뉴스룸에 들어온 수습기자들이 선배기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생산문화를 체득하게 되는 비공식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거론되던 공식교육 부분에서 언론윤리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각 회사/언론재단의 수습기자 교육과 대학의 언론윤리교육의 위치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언론의 수습기자 교육은 여전히 도제식으로 진행되어 교육보다는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 수습 교육(education)을 언론사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경우는 중앙의 몇몇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⁹⁾ 작년 수습교육을 담당했던 방송사

9) 이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도 유사했음. MBC의 경우 작년 파업 이후 인재개발실에서 의욕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지방의 언론사들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적인 재교육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의 한 기사에 의하면 세월호 이후 기자들도 “취재 윤리에 대해 상처에 가까울 정도로 경각심을 갖게 된 상황인지라”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몇몇 언론사는 수습기자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의 공식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¹⁰⁾ 이러한 경향이 언론계 전반적인 흐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전국지와 달리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된다. 지역지의 재정적 상황 상 수습기자 선발은 간헐적으로 이뤄졌고 선발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 언론사의 경우, 자체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이를 통한 ‘교육’을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과 지방의 대부분 언론사들이 그렇듯이 수습기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데, 재단과 일정이 안 맞을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수습기자의 수를 절반씩 나눠서 언론진흥재단의 수습기자 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력 지역지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장에서 주변적 위치에 존재하는 언론사가 체계적인 기자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운영하고 있다고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한국에서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식 교육의 한 축은 언론진흥재단의 수습기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2주 정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경우, 언론윤리자체세미나의 비중이 높았으며(수습기자들의 토론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2주 72시간의 교육 중 8시간), 최근에 있었던 288기 교육의 경우, 양성평등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한 ‘성평등 보도를 위한 젠더 감수성 높이기’(2시간)¹¹⁾, 자살보도의 취재윤리(2시간)등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국 저널리즘의 젠더/인권 감수성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학계는 과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해본다. 학계는 윤리를 말할 수 있는 ‘언어’, 다양한 저널리즘 윤리의 패러다임, 그에 기초한 기자윤리를 제공해야할 집단이다. 저널리즘이라는 장은 현장과 이론의 긴밀한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저널리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쟁점과 이슈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대안적인 윤리에 대한 모색하는 것이 바로 학계의 역할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대학의 상황은 변화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공감적 능력을 갖춘 기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의 편입, 시장이 요구하는 대학인재 양성이 대학의 지배적인 역할로 부상한 가운데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의 ‘토대’를 이루는 연구 분야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언론윤리관련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윤리의 문제는 저널리즘 관련 과목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에 대한 논의, 객관성과 관련된 논쟁을 짧게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무위주의 교육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취재보도론과 같은 과목은 대체적으로 현장기자들이 진행하는 글쓰기 강의였다.

10) 실제로 MBC의 경우, 최근의 수습기자 교육에서 인권위원회 방문 및 여성단체에서의 교육을 받는 일정이 포함되었으며, 한겨레의 경우, 1주일간의 직무교육 중 언론윤리, 객관성 공정성과 같은 규범 교육, 재난/자살/젠더 및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11) 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2015년부터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꾸준히 실시되었다고 했지만, 287회 수습기자 교육에서는 저널리즘 윤리와 젠더 관련 이슈는 부재했던 것으로 봐서 일정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었던 것 같다.

명목적으로 기자를 양성하는 책임을 진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의 역할과 사명과 관련된 교과목이 적다는 것은 우리학계가 미디어 생산자의 윤리 문제에 무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임영호(2015)가 언급했듯이 아직 우리는 언론윤리라고 내세울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강의'의 존재는 '해당 연구자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강좌의 부재는 윤리 분야 연구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연구의 전반적인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젠더/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인 저널리즘 윤리를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4. 젠더 감수성은 어떻게 고양할 수 있을 것인가?

: 여성주의 저널리즘 윤리의 활용과 성찰을 위한 모색

여성주의 저널리즘 연구는 언론노동은 젠더화 된 노동이고, 미디어 조직은 젠더화 된 조직임을 지적해왔다. 한국 언론의 젠더 감수성을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언론노동과 미디어 조직의 성편향성을 극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성언론인의 수적 증가와 의사결정 라인으로의 진출확대, 강간문화를 용인하는 성차별적인 문화/취재 관행에 대한 개선, 여성기자의 근속연수를 늘리고 조직 내 인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실시(ex-아빠 육아휴직의 확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등은 여전히 중요하다.

강간문화가 용인되는 현재의 직업문화 및 관행은 남성중심적인 시간성과 관계성에 의존해왔던 저널리즘의 의례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관계성, 시간성에 기초한 취재 관행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성인지적인 직업윤리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존의 국내의 여성주의 저널리즘 연구의 공백 역시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새로운 윤리에 대한 모색은 비판을 넘어 대안적 실험을 가능케 하는 '도구'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성주의 입장이론과 보살핌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여성주의 저널리즘 윤리는 저널리즘이 밝히고자 하는 '진실', '사실'이 역사적으로 특정 국면에서 특정 집단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물이며, 생산의 과정에서 기자집단이 갖고 있는 편견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한 현상을 둘러싼 실제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이들과의 공감에 기초한 취재 행위 뉴스생산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윤리에 기초한 뉴스 생산과정은 투명성과 기자의 성찰성, 그리고 취재원 및 뉴스 콘텐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인종주의적, 성차별적, 이성애적 편견들이 어떻게 뉴스생산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기사가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취재로 인해 소수자 취재원이 받을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자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또한 이슈의 선정, 뉴스원의 선정, 그리고 뉴스의 서사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타자의 목소리와 조건에 민감할 것을 요청한다. 소수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특수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들이 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제

안/상황등을 수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역할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정의한다 (Steiner, 2008). 여성주의 저널리즘 윤리는 소수자 취재원에 대한 언론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취재원의 삶 전체를 인식/고려하는 가운데서 취재가 이뤄져야함을 강조한다(보도/인터뷰가 취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생존자라는 인식에 기초한 후속보도 등).

사회적 소수자에 민감할 수 있는 기자윤리, 취재의 윤리는 더 노동집약적이고 더 많은 감정 노동을 요구한다.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이 견지하던 전통적인 뉴스 가치, 그리고 그에 기초한 이상적인 기자상(ideal journalists)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행화된 뉴스 서사구조-사건의 극화, 희생자화-에서 탈피하고, 사건이 소수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서사구조의 모색, 다양한 저널리즘적 시도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Steiner, 2008).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한국의 언론생태계에서 사회적 타자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 문화 만들기는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레거시 미디어의 영역인 전통적 저널리즘에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차별적이고 때로는 여성혐오적인 언론계의 오래된 습속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미디어 조직을 비롯한 기자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성차별적 관습을 넘어 새로운 실험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려면 여성기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좋은 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계와 정책당국의 노력과 관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는 내적인 노력을 통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이 움직임을 견인하는 담론적/사회적 조건의 변화일 것이다. 언론계에서 젠더 이슈에 주목하는 것도, 젠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여성운동의 힘이 크다. 저널리즘은 정태적인 영역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영역이며, 또한 치열한 정치의 영역이다. 2세대 여성운동 이후 미국 언론의 변화, 그리고 2016년 강남역/2018년 미투 운동이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움직임은 변화를 촉구하는 외부적 힘과 현장의 내부적 각성이 융합되었을 때 가장 활발해질 수 있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좋은 저널리즘이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자의 힘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아.(2012).[쟁점과 동향]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여성 정치 주체의 가능성.페미니즘 연구,12(1),193-217.
- 김수아.(2007).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돌우기 실천.한국언론학보,51(6),346-380.
- 이영희 (1978). 한국 남기자공. 여기자클럽 편. <여기자> (184~186). 서울: 세대문고사.
- 임영호(2015). 옮긴이 서문. 켈리맥브라이드 & 톰로젠스텔 엮음. 임영호 역(2015). 디지털시대의 저널리즘 윤리-진실. 투명성. 공동체.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광모 (1978). 금주수난. 여기자클럽 편. <여기자> (235~239). 서울: 세대문고사.
- 정민경(2017. 12. 14). 단톡방 성희롱' 기자들, 한국기자협회 자격정지-파이낸셜뉴스 기자 자격정지 2년, 세계일보·아이뉴스24·머니투데이 기자 1년 6개월 자격정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303>
- 최서영 (2007.9). 새로 보는 낡은 지도. <관훈저널>, 104호, 85~113.
- 켈리맥브라이드 & 톰로젠스텔 엮음. 임영호 역(2015). 디지털시대의 저널리즘 윤리-진실. 투명성. 공동체.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한국의 언론인 2017>.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희정.정의진 (2019). 저널리스트의 성폭력 경험과 무보도 현상: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원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권 1호, 225~252.
- Durham, M. G.(1998). On the Relevance of Standpoint Epistemology to the Practice of Journalism: The Case for "Strong Objectivity", *Communication Theory*, Vol8(2), 117-140, <https://doi.org/10.1111/j.1468-2885.1998.tb00213.x>
- Dodge, A. (2016).Digitizing rape culture: Onlinesexual violence and the power of the digital photograph. *Crime Media Culture* 2016, Vol. 12(1) 65-82
- Steiner, L.(2008). Feminist media ethics. In L.Wilkins & G.C.Christian(eds). *Handbook of mass media ethics* (pp.366~381).
- Turkle. S.(2010/2012). Alone Together. 세리터클. 이은주 譯. 외로워지는 사람들-테크놀로지가 인간 관계를 조정한다. 청림출판.
- Usher, N., Holcomb, J., & Littman, J. (2018). Twitter makes it worse: political journalists, gendered echo chambers, and the Amplification of Gender Bi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3(3), 324-344.

메모